주민이 주도하는 에너지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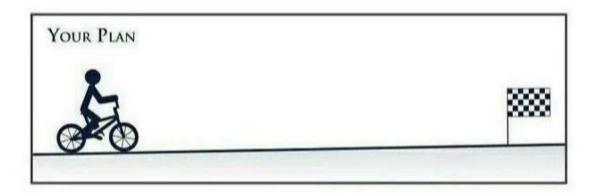
2020. 11. 27. SVS 사회적금융 웨비나

당진시 기후에너지과 박규섭

목차

- 에너지전환의 양상
- 국가 에너지정책 구조
- 주민 관여 에너지전환 사업
- 당진시 사례
- 주민주도 에너지전환의 가능성

에너지전환의 양상



- 중앙집중형 국가 에너지 정책
- 기초지방정부의 소극적 에너지 행정
- 다양한 주민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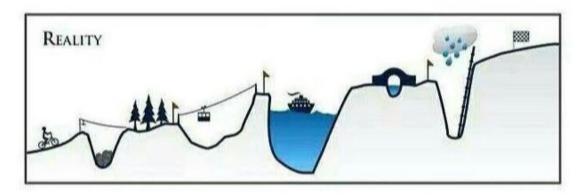
출처: 솔라투데이(2019.8.6.)



출처: 강원도민일보(2018.3.23.)

에너지전환의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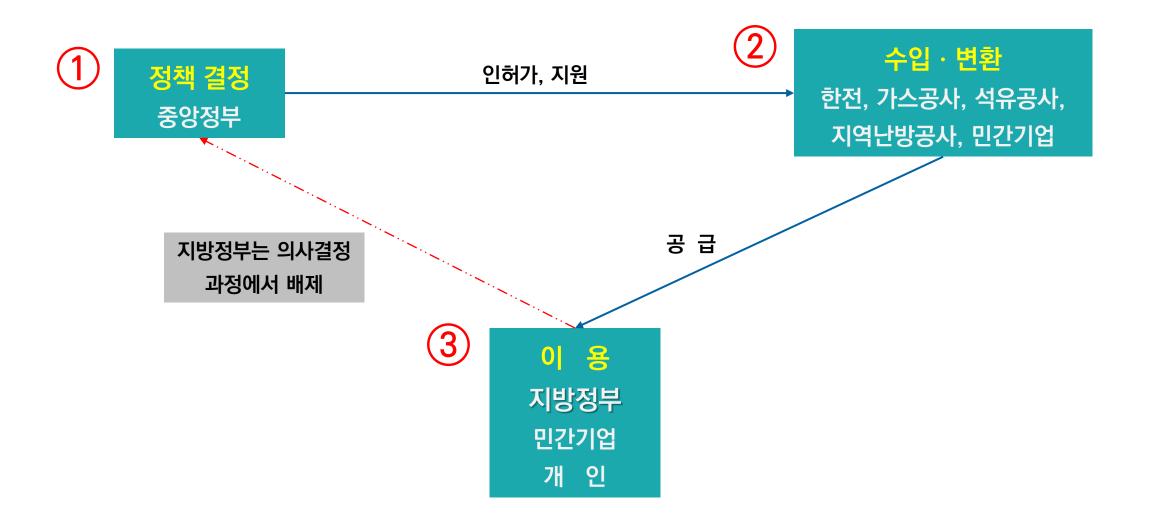
- 중앙집중형 국가 에너지 정책
- 기초지방정부의 소극적 에너지 행정
- 다양한 주민 입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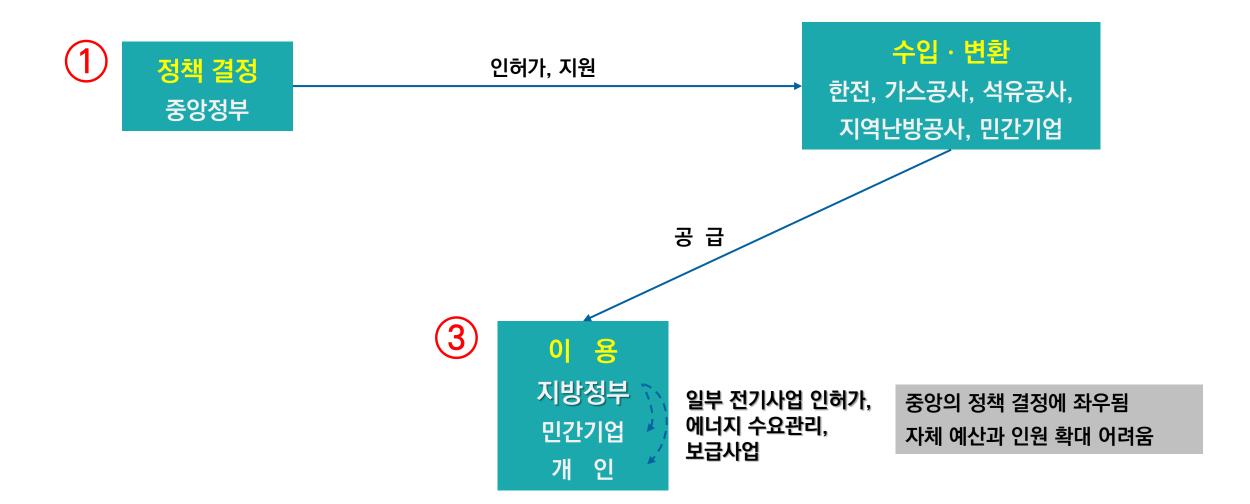


출처: 솔라투데이(2019.8.6.)



출처: 강원도민일보(2018.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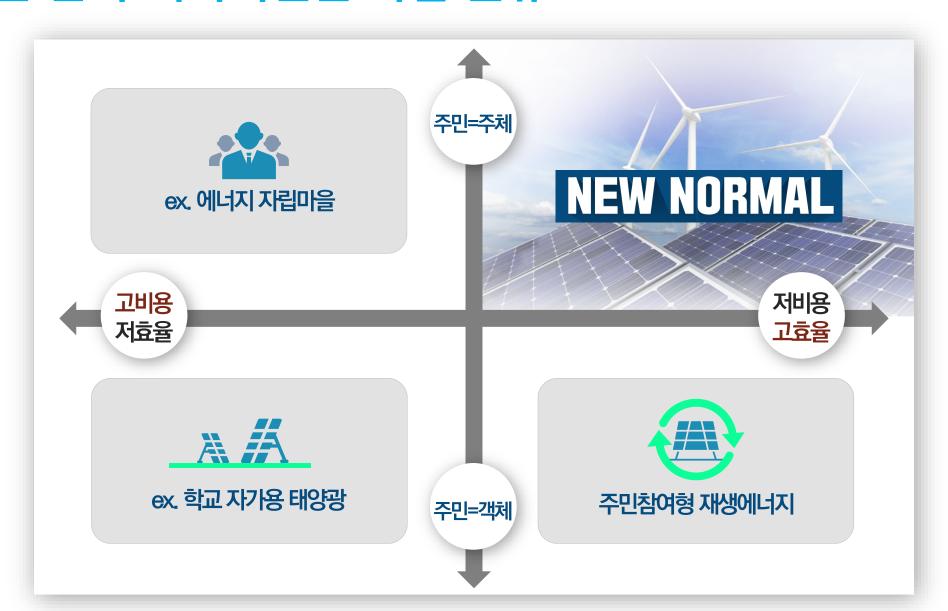


인허가, 지원 공 (3)1. 지역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안산, 당진, 전주, 광명, … 2. 에너지 관련 산업 기반 마련, 유치: 군산, 나주, 진천… 지방정부 3. 자체 조직 확보, 거버넌스: 에너지 관련 지방정부협의회 4. 에너지센터 설치: 당진, 울산 남구, 광명, 전주,…

수요지 인근 전원전력 프로슈머에너지 新시장발전용 연료전지,
열병합 발전소설치 확대,
구역전기사업 내실화자기용 태양광, ESS, V2G 등
보급 확대
자기소비 지원태양광, ESS, V2G 등
분산전원을 모아
기상발전소로 참여

시기	제1차(2008~2030)	제2차(2014~2035)	제3차(2019~2040)
계획	자립사회 구현 탈석유 에너지 저소비 일자리 창출 에너지빈곤층 감소	수요관리 분산에너지 확대 환경과 안전의 조화 신·재생 보급 확대 전통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에너지바우처 도입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에너지믹스 분산형 · 참여형 확대 글로벌 경쟁력 강화 에너지전환 기반 확충
평가	원전 확대 수요예측 실패(산업 부문) 에너지가격체계 미개편 전기 전환 급등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단기 · 산발적 빈곤층 지원	실제 수요감축 부진 분산에너지 확대 실행계획 부재 석탄발전 감축의 어려움 바이오 · 폐기물 비중 증가 집단에너지 등 미비 갈등관리시스템 대두	2

주민 관여 에너지전환 사업 분류



주민 관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구조

구분	주민 주도		주민 참여
사업자	주민		주민 아님
주주 구성	단일형	SPC형	
	주민이 조합원 또는 주주인 법인	주민법인(대주주), 지역금융, 향토기업, 지방정부 등	사업시행자, 발전공기업, 금융기관, 엔지니어링사 등
주민참여방식	주민법인이 발전사업 계획, 운영, 관리 총괄		외부사업자의 발전사업에 지분 참여, 채권 투자, 펀드 참여
사업비 구성(안) 자기자본:타인자본	대형(3MW이상) 9:1	대형(3MW이상) 5:5	1:9
	중형(1~3MW) 5:5	중형(1~3MW) 3:7	_
	소형(1MW이하) 3:7	소형(1MW이하) 3:7	_
특징	주민이 사업 control 可		큰 부담 없이 대규모사업에 참여 可 보상 및 운영이익 공유는 구분필요
장벽	일반 PF 어려워 정책자금 활용(행정비용 상승)		주민 갈등 가능성 상존, 사업자 및 행정의 주민에 대한 오해 상존
지방정부 관여 현황과 방향(안)	부지 임대	사업 참여 검토	주민수용성 확보 중재
	부지 적극 발굴 및 임대	사업 지분 참여	지방정부 주도 사업 개발 및 주민 참여 의무화
주민참여방향	주민법인 구성 및 추진	주민법인이 발전공기업 등과 협업하는 모델 추진	지방정부에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건의 및 주민법인과 개인이 지분 투자, 채권, 펀드 등으로 적극 참여

당진시 배경. 지역 에너지정책 기반 마련

교육, 실천과제 도출

비전, 실천과제 최종 확정

에너지기본계획 수립(2018. 3.) → 시민참여 에너지전환 비전 수립

교육, 비전도출

비<u>전선</u>포 (2018.9.28.)

▋ 실행, 평가 ▮

비전 가능성 세부검토 교육, 홍보

에너지기본조례 제정 2019. 1.

에너지위원회 구성(공약) 2019. 4.

에너지기금 마련(공약) 2019. 6.

에너지센터 설립(공약) 2019. 6.





당진시 사례2. 에너지전환 지원조례(안)

재생에너지 사업 주민참여 의무화

- 산업부 RPS고시의 주민참여 기준을 따르게 함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 전문기관을 통한 사업계획 구상 및 컨설팅
- 설치비용 융자
- 계통접속비 지원
- 시 매체를 통한 홍보
- 시유지 수의계약 대부(비영리조직)
- 대부료 경감(비영리조직)

주민주도 에너지전환의 가능성

주민의 시도

주민주도 다양한 시도와 실패 사례(실패 없이는 성공이 없음) 주민법인 스스로의 역량 강화(대규모 사업 경험) 주민이 단순한 주민법인의 참여자로 머물러서는 안됨

사회적 합의

에너지전환의 목적에 대한 사회적 합의(정파를 떠난 생존의 문제) 에너지비용 상승에 대한 사회적 합의(전기요금 상승 없는 에너지전환은 불가능)

정책의 전환

지방정부의 인식 전환과 정책 방향 전환 법제도 마련 필요(용량에 따른 법적 의무화 필요) 주민의 다양한 입장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정책 유도(획일화된 발전사업 지원에서 탈피)